

TIER 1 | USCIRF-RECOMMENDED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미연방정부 산하의 초당적이며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 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전 세계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데 국제적인 표준을 사용하며,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장관 및 미국 의회에 권고하는 정책안을 마련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2019 년도 연례 보고서는 현지에서 자행되는 침해 실태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미국 정부에 독립적인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들과 전문 요원들의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9 년도 연례 보고서는 2018 년 1 월부터 2018 년 12 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본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202-523-3240 으로 연락하면 된다.

북한

개요: 북한의 2018 년도 종교 자유 실태는 2017 년도와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라고도 불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억압된 사회 중 하나이다. 북한 정권은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며 오로지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독립적인 집회나 의사 표현을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교 국가이지만 북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예배당 몇 곳에서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종종 이러한 시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예배당의 신자들 또한 그 역할을 위해 선정된 사람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행위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으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나 심지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관점을 가진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정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물론 그 가족까지(해당 종교를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 구금, 고문 및 처형까지 집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은 현재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에 대략 8만 ~ 12만 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으며, 이들 중 무려 5만 명의 인원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한 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북한 정권에서의 종교 자유 증대 및 관련 인권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2018년에도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철저한 탄압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2019년에도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판단하였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였으며, 가장 최근 지정 시점은 2018년 11월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1974년 무역법 402조 및 409조(잭슨-베닉 개정조항)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국제인권감시단이 북한 내의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도록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라고 북한 정부를 압박한다.
-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인권 수준을 국제 표준과 일치하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정부의 진실된 입증 노력 여하에 따라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된 향후 논의를 진행한다.
- 현재 공적인 북한인권특사를 채용하고, 국무부 내 독립적인 정식 직책으로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해당 직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한다.

- 가능한 경우 언젠든 북한인권특사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담당 특별대사를 북한과의 협상이나 북한에 관한 공식/비공식 회담에 모두 참석시켜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의제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타당한 경우 인권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비핵화 및 안보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포함시킨다.
- 북한 내는 물론 국경 지역에 송출되는 기존 라디오 프로그램의 범위 확대 및 휴대전화, USB 메모리, DVD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 보급 촉진을 비롯하여 원활한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배경

북한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1 당제, "주체 사상" 또는 "자주 사상"을 공식 국가 이념으로 삼음

인구: 25,381,085 명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신앙: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 단체(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 등) 운영

종교인구 분포*: (참고: 이전 수치로서 확인 어려움)

1% 미만: 기독교

기타 단체: 전통적인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 현지 종교 운동인 천도교

** CIA 월드 팩트북(CIA World Factbook), 미 국무부 및 한국 통일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추정치

북한 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나 통치 방식은 여전히 공산당과 유사하며, 북한 정권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며 오로지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는 현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개인숭배에 버금가는 유사 신앙심과 신격화를

불러 일으킨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한 이와 같은 신격화에 따른 권력을 누렸다. 많은 주체 사상의 개념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종교 교리에 어긋나기 마련이다. 종교적 또는 기타 이유로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저항할 경우, 이를 정치적 전복 행위로 보고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 중 하나이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실제로 종교 또는 신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사 표현이나 독립적인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무교 국가인 북한에서 종교가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유엔(UN)은 2002 년도에 북한 주민 중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인원이 대략 20 만 ~ 40 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사 보고 기간 종료 시점까지 새로 확인된 수치는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과 함께 현지 종교 운동인 천도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종교를 믿는 북한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며, 가족들이 연좌죄의 적용을 받아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깊은 두려움에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신앙을 숨긴다.

북한 정권은 보통 외부 위협과 대규모의 군사비 지출 및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장하는 강경한 어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부 단속 행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대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되었다. 하지만 2018 년에는 평양에서도 특유의 공격적 담화 발표를 축소하고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국제 체제에 보다 더 깊이 편입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일례로, 남한에서 개최되었던 2018 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핵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전면 중단 약속 등을 포함한 일련의 긍정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2018 년도 종교의 자유 실태

북한에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하는 것조차 드문 일이며, 탈북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제재는 나날이 강화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헌법에는 인민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국영 예배당에 대해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마치 북한 내 종교 생활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지만 결국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삼엄한 제재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활동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각종 종교와 관련된 물품들을 주로 중국에서 밀반입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형법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외국의 종교 관련 물품을 단순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 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체포, 고문, 태형 및 처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할 경우 정부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표현을 정권 유지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2018 년에도 북한의 신도들은 여전히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알려진 종교인과 접촉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종교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서방, 특히 미국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고등 감시 기관을 통해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투옥시킨다. 종종 이들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까지(해당 종교를 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투옥된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의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에 약 8 만 ~ 12 만 명의 정치범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5 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무기한 억류된 상태로 주로 북한의 핵무기 및 기타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문을 받으며 자의적 처형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도 당국이 종종 수용소 내에서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따로 선정하여 한층 더 가혹한 탄압을 한다고 한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퍼져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한 종교 활동이 상당히 민감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교회 위치와 신도의 규모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에서 발간한 2017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평양 주민 중 일부가 이러한 지하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중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도를 벗어난 지방의

경우 지하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많은 탈북자들이 이러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라디오 프로그램인 극동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FEBC)을 청취하며 종교 프로그램에 접하기도 한다. 이 방송국에서는 탈북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오디오 설교와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기독교 단체가 밀수업자를 통해 북한에 라디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라디오 수신기를 기증하고 있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라디오에 특정 채널이 미리 설정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극동방송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은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 잘못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로는 개신교 교회 세 곳, 천주교회 한 곳, 러시아 정교회 한 곳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공식 종교 시설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종교적 원칙 대신 친정부 선전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유일한 천주교회는 교황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신부도 없이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 남한의 천주교 신부인 김연수 신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내 유일한 천주교회의 신도는 3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격식없는 일반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종교 시설의 신도들은 그러한 역할에 맞게 선정되거나 배정된 사람들로, 외부에서 볼 때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 기독교 단체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과 수년 간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설교에 진실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2018년 10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개인적인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적인 교섭 통로를 통해 초청장을 받으면 방북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방북에 앞서 명시하지 않은 특정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바티칸 교황청 관계자는 이러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순방 일정 때문에 2019년에 방북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교황 중 단 한 명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겠지만, 일각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천주교 신앙의 정당화에 활용 수단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난민: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종결된 이후로 10만 ~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근과 종교적 박해 및 인권 유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였다. 북한 현지의 실상과 관련된 투명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소중한 정보원이 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길이 1,416 km(880 mile)에 달하는 북중국경을 통해 탈출한다. 이 국경은 꽤 허점이 많고 국경 지역의 순찰 또한 허술한 편이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정착하기도 하지만, 중국부터 시작해 복잡한 경로로 여러 국가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남한을 선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입국 이후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이 경비가 삼엄한 남북 접경지대를 통해 바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많은 여성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 결혼 또는 강제 성매매로 팔려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민으로 간주하고 체포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의 공조 하에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추적 및 색출하고 구금 후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1951년 채택된 유엔의 난민협약(Convention on Refugees)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탈북에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본국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당국은 종종 탈북 송환자들에게 외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취조한다. 만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할 경우 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투옥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미국의 정책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한 [정책 개정 안내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조사 보고 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군사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 분쟁을 일으키는 갈등 요소였다. 김정은은 이에 화답하듯 지금까지 알려진 핵실험장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기지를 해체하는 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 구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약속을 지켜주었다.

2018년 5월에는 북한 정부가 억류하고 있던 세 명의 미국인(김동철, 김학송, 김상덕)을 석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의의 제스처는 2012년 이래 북한이 미국 시민을 구금하지 않은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북한은 과거에 자국 내 미국 시민을 독단적으로 감금한 후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곤 했었다. 이 때문에 2018년 8월, 미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였다. 이 금지 조치가 2017년 처음으로 발효된 이래로 다양한 인도적 단체와 개발 단체들이 북한 내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 인정에 있어 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인권과 안보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회담 직후, 미국무장관인 마이클 리처드 폼페이오는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와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의 합의 사항을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사 보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에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17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P.L. 115-198)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종교적 약자에 대한 박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숭배 강요를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반복적이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인도범죄 공모 행위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2018년 7월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개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에서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는 탈북자인 지현아씨가 참석해 성경을 소지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 정권의 감금과 고문에 처했던 사실을 증언하였다. 부통령인 마이클 리처드 펜스는 "북한의 지도층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수십 년간 비할 데 없는 궁핍과 잔혹함을 강요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미국 정부는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P.L. 114-122](#))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적국에대한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P.L. 115-44](#))에 따라 수정되었다. 일례로 2018년 12월 미 재무부는 인권 유린과 검열 혐의로 북한의 고위 관리 세 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가 발간한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2014년을 시작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개최해왔다. 지난 해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원래 2018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총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연기된 상태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2019년 연초에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8년 11월 28일, 북한을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참여했거나 묵인한 것을 이유로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무부는 1974년 무역법의 잭슨-배닉 개정조항에 따른 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왔다. 잭슨-배닉 조항은 미국 의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진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통상적인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후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어왔다.